헬기기총소사·암매장 등 계엄군 만행 드러날까

5·18 특별법 국회 통과…밝혀야 할 진실과 전망

군에 의해 자행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총체적 규명

'80위원회' '511분석반' 등 5·18 조작·왜곡도 밝혀야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이 통과돼 지난 38년간 감춰졌던 '5·18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5·18 관련 핵심 의혹은 크게 '최초 집단발포 명령자', '헬기기총소사 명령자', '행불자 암매장지' 등이다.

특별법(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세분화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규명해야 할 사안을 7개 사건으로 나눠 적시하고 있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등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조작의혹 사건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조사 범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5·18 당시 계엄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발포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그 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이다.

5·18 당시 최초 발포는 1980년 5월19일 오후 4시5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 계엄군은 장갑차가 시위 군중에 포위되자 총을 쏴 김영찬(당시 조대부고생) 군이 총상을 입었다.

첫 집단발포는 하루 뒤인 5월20일 밤 11시께 광주역 앞에서 자행됐다. 제3공수여단은 시위대 차량에 의해 부대원이 사망하자 일제히 사격, 광주시민 2명이 사망했다. 이튿날인 5월21일 오후 1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계엄군이 애국가 소리와 함께 엎드려 쏴, 무릎 쏴 자세로 집단발포, 시민 수십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 같은 시간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은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은 지난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 전두환·노태우 등이 광주 비행장에 각각 내려와서 전교사사령관, 505보안부대장을 만나고 갔다는 사실을 2군사령부 참모부에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광주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 이를 부인했다.

조사위 활동을 통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등이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은 총 242명으로 이중 행적이 뚜렷한 82명만 행불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시는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용역을 맡겨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행불자 124명의 가족, 299명의 혈액을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옛 너릿재터널 인근, 서구 치평동 옛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인근에서 암매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일부 5월 단체 관계자들은 1980년 당시 광주천변에 거주하던 노숙자 등이 모두 사라진 점을 들어 실제 행불자는 9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위는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령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등 5·18 왜곡·조작 사건도 파헤친다.

지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드러난 왜곡 주체는 크게 1985년 전두환 정권이 만든 '80위원회'와 노태우 정권 시절 꾸려진 '511연구위원회', '511분석반' 등이다.

'80위원회'의 목표는 모든 5·18 자료를 모아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511연구위원회' 등은 5·18 군 관련 일지·쟁점사항 정리, 국방부 기본 입장 정리, 국정조사 대응책 검토 등이 임무였다. 최근 서주석 국방차관이 511연구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들의 자료 은폐, 왜곡은 5·18 진상규명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5·18연구자들은 이들의 조작을 역추적하면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조사 범위에 포함된 '5·18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도 이번 기회에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76)씨는 지난 2015년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올린 뒤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군 5·18 개입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8 현장 사진에 나온 시민들이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라고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게재한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북한군 투입설을 사실인 것처럼 담아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씨와 두 손 잡고 인사하고 있다. 2·28 민주운동은 지난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대구 8개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시위다. /연합뉴스

광주시·5월 단체·지역 정치권 "5·18 특별법 통과 환영"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28일 광주의 5월 단체와 지방정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향한 기대를 드러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공동입장 자료를 내고 "특별법 통과로 38년 만에 진상규명의 문이 열렸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위원 수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축소되고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을 빠졌다"라며 "수사권조차 없어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날 성명을 통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환영한다"라며 5·18 특별법 국회 통과를 반겼다. 시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대열의 맨 앞에 서서 국민통합의 대장정에도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지역 정가도 여야 구분 없이 5·18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오광록기자 kroh@

"달빛동맹, 대구와 광주 함께해 2·28 국가기념일 지정 끌어내"

文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구 방문 2·28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8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전날 검찰이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등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한 직후 이뤄진 대구 방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보수의 아성처럼 여겨지는 대구가 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생민주화 운동이 발원한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 있던 민주주의를 깨웠다"며 "2·28 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고 마침내 3·15 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쓴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시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촛불혁명의 정신이 대구에서 발원한 2·28 민주운동의 정신과도 맥이 닿아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2·28 민주운동은 올해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됐다.

특히, 대구와 광주는 지난 2013년 '달빛동맹 강화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4년부터 대구시장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광주시장은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수를 상징하는 도시인 대구와 진보를 상징하는 도시인 광주가 힘을 합쳐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제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영·호남과 진보·보수라는 대립구도를 벗어나 모든 국민이 계승해야할 정신적 유산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장 후보 경제인 물색, 전남지사는 장만채 1순위로 생각"

바른미래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와 관련, "명망가와 경륜 있는 사람보다는 젊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영입해서 후보로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전남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후발정당으로 인재풀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에다가 침체한 광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마인드를 갖춘 경제인 또는 성공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물색 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 "장만채 전 남도 교육감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안철수 전 대표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고 이번 바른미래당의 출범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박주선·김동철·주승용 의원 등) 선택에 대해서도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전남교육을 이끌어오면서 지지율이 높았고 학부모들과의 스킨십도 죽 해오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벌써 전화로 영입 의사를 전달했고 장 교육감으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광주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도 물색 중이다. 전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다"며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륜 있는 인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역 의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유일한 전남 의원인 주승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전남은 이미 무산됐다"며 "하지만, 광주에서는 저와 박주선 대표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압도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다. 어마어마하게 요동칠 수 있는 기간이다"고 관측했다. /박지경기자 jkpark@